

# 코로나 진정세...지역민 협조·공무원 헌신 돋보였다

### 공무원 휴일 반납 총력·시민 방역수칙 준수...광주·전남 확산 차단 지침보다 넓은 방역망 구축 등 효과...방심 말고 추가 감염 막아야

광주·전남 등 방역당국의 노력과 시민의 높은 참여 의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은 최근 8·15 광화문 집회 여파 등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겪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에 이를 극복하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사이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거주하는 5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누적 확진자 수는 484명으로 늘었

다. 광주 484번은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483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두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에선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한때 하루 39명(8월 26일)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최근 5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3명 이내를 유지하는 등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8월 27일 '3단계에 준하

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령한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방역활동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8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보건소 직원 중 일부는 근무 도중 쓰러지는 등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황에서도 휴일까지 반납한 채 하루 24시간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지켜내고 있다.

시민들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 최소화 등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면서, 코로나19 대확산을 막아내는 '일등공신'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시 산하 공직자들도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심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전남은 지난달 17일 전남 50번 확진자 발생 이후 대형마트 푸드코트, 헬스장 2곳 등 순천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진도, 구례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순식간에 166명(전남 166번)까지 불어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지역

민 협조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전남 방역당국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세 조기 차단 요인으로 '지침보다 넓은 방역망 설정'을 꼽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순천을 중심으로 8월 중순 재확산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넓게 방역망을 설정하고 대응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에는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토록 했는데, 저희는 확진자 발생 이후 당일 방문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주변 건물 방문자 및 종사자까지 자가격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망 강화로 확진자 중 상당수가 방역당국 통제 범위에서 발생하면서 대규모 확산을 막아낸 것이다. 실제 누적 확진자 165명 중 31명은 최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후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접촉자가 최소화되면서 조기에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역주민의 방역 협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확진자 발생 업소는 물론 교회 등 종교계와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광주와 함께 전남 지역 99개 전세버스 운송사들도 오는 10월 3일 보수단체 주최 개천절 집회 차량 운행 거부 결의까지 다짐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방역 협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확진자 발생 업소는 물론 교회 등 종교계와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광주와 함께 전남 지역 99개 전세버스 운송사들도 오는 10월 3일 보수단체 주최 개천절 집회 차량 운행 거부 결의까지 다짐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노래방 업주들 광주시 방문 집합금지 해제·손실 보상 요구

광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광주시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지회와 광주노래연습장조합 노래방 업주 등 160여명은 16일 오후 광주시를 찾아 고위험시설 제외 등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무지구 유흥주점업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면서 "광주시에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래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추후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업소에 한해서만 영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광주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완도 김양식장 자재창고 '의문의 화재'

CCTV 없는 곳에서 발생  
경찰, 방화 가능성도 조사

완도지역 김양식장 자재 창고에서 불이나 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6일 완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1시 20분께 완도군 소안면 김양식장

자재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김양식장에 사용되는 김발 등 양식도구가 모두 불에 타 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실화나 방화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현장에 CCTV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수년 전 인근 마을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방화 여부 등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CCTV를 설치한 이후 4년 여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다가 이번에 CCTV가 없는 곳에서 불이 난 점을 중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건의 불이나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방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방화를 입증할 만한 물증

이 없어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재가 있다르자 마을 주변에 CCTV를 설치했고, 이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화재 피해 어민들은 누군가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과속사사 등을 동원해 정확한 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성 추행·불법촬영 현행범, 다른 여성 찍은 몰카는 무죄 왜? "적법 절차 없이 휴대전화 압수...증거 무효"

먼지떨기식 압수 관행 제동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나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고있던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확인,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까.

A씨는 지난해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일행 중 한 명인 B씨를 강제추행했고 몰래 촬영한 사실이 B씨에게 발각되면서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휴대전화에 B씨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에 데려간 뒤 휴대전화를 검색, B씨 외에 다른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파일 여러개를 발견해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후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B씨 외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은 확인됐다'는 점을 압수수색 사유로 적시했다.

법원은 휴대전화를 특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거

쳤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라 기존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중간계 추행 혐의와 2명의 다른 여성들에 대한 범죄 사실(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경찰이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혐의의 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동영상 파일까지 검색,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붙잡은 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별도의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범죄사실 중 B씨를 상대로 불법촬영 및 중간계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다른 여성들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영장이 허용하는 압수 범위도 체포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키워드 검색, 대상 폴더와 검색 기간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강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를 '무효'라고 판시, 수사기관의 먼지떨기식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조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조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